

2019 지방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9.10.12 시행)

출제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19 지방7급 행정학은 최근 다른 7급 행정학 시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출제되어 체감난이도가 9급과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7급수준의 문제로는 평이한 출제였다고 봅니다. 정형화된 기출문제(변형포함)가 15문항으로 비교적 많았고 그동안 빈출되었던 A, B급 주제에 대한 출제비율도 95% 정도로 높았습니다. 다만 A/B급 문제를 약간 깊이있게 출제하여 난이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로는 총론에서 무려 6문항이나 출제되었고 조직론에서는 1문항 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예산	환류	자치
6문	3문	1문	4문	2문	1문	3문

기출	변형	신경향	A급	B급	C급	D급
1문	14문	5문	17문	2문	1문	0문

이번 지방7급 행정학은 변형되고 새로운 지문이 추가된 기출문제가 많아 단편적인 암기나 정형화된 기출문제 위주라면 공부한 수험생은 약간 고전하였을 것이고 심화이론이나 기출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폭을 좀 넓혀 이해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은 95점 이상 충분히 고득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7급 행정학은 85~90점 이상이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행정학시험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하여 난이도를 대체로 중상정도로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난이도 조절의 방법으로 종합형문제, 기출변형문제, 숫자문제, 응용문제, 법령문제를 포함하여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제될 수도 있는 경계문제(나올라 말라하는 언저리 부분), 즉 빈출범위를 약간 벗어나면서도 의미있는 새로운 내용들(약간 지엽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경계문제)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 고득점은 어려워집니다. 물론 시험에 임박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야겠지만 평소 심화이론이나 기출수업때는 그런 언저리(가장자리)내용을 다루어주는 완성도 높은 강의를 접하는 것이 고득점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7급시험도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김중규 -

01.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답] ①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한다. 로위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재분배정책의 경우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행위의 환경(사회전체)이면서 강제력의 적용방법이 직접적인 정책에 해당한다. 재분배정책은 사회전체에 걸쳐 부의 분포를 강제적(인위적)으로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 ② [X]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인의 행위가면서 강

제력의 적용방법이 직접적이다.

③ [X]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은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행위의 환경이면서 강제력의 적용방법이 간접적이다.

④ [X]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은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인의 행위가면서 강제력의 적용방법이 간접적이다.

● Lowi의 정책유형 구분

구분	강제력의 적용대상(적용영역)		
	개인의 행위		행위의 환경(사회전체)
강제력의 적용 방법(행사방법)	간접적(원격적)	배분정책	구성정책
	직접적(즉시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2019 7급 선행정학 p.194

02. 다음 중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 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 ㄷ.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
- ㄹ.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

-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답] ④ ㄱ, ㄴ, ㄷ, ㄹ 모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들이다.

☑ ㄱ [X]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20조).

ㄴ [X]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의 경우에는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지방자치법 제16조).

ㄷ [X]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자치법 제15조).

ㄹ [X]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주민투표법 제7조).

☞ 2019 7급 선행정학 p.841

03.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 체제를 선호한다.
 ㄴ.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ㄷ.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ㄹ. 행정관리의 이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ㅁ.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답] ② ㄱ, ㄴ, ㄷ만 옳다. ㄷ, ㅁ은 틀리다.

- ☑ ㄷ [X]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전통적 관료제에 해당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한 결과지향 정부를 지향한다.
 ㅁ [X]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통적 관료제에 해당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분권화된 조직(탈관료제적 조직)에 의하여 참여와 팀워크(협의와 네트워크 형성)를 통한 시장지향정부를 지향한다.

●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의 특징

전통적 관료제		기업형 정부(NPM)	10대 원리
노gett기(rowing)	⇒	방향기(steering) 역할	축매적 정부
직접해움(service)	⇒	할 수 있도록 함	시민소유정부
독점 공급	⇒	경쟁 도입	경쟁적 정부
규칙중심 관리	⇒	임무중심 관리	임무지향 정부
투입중심	⇒	성과중심	결과지향 정부
관료중심	⇒	고객중심	고객지향 정부
지출지향(지출절감)	⇒	수익창출	기업가 정신
사후치료	⇒	예측과 예방	예견적 정부
집권적 계층제(명령과 통제)	⇒	참여와 팀워크(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분권화된 정부
행정매커니즘	⇒	시장매커니즘	시장지향 정부

☞ 2019 7급 선행정학 p.168

04.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답] ③ 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임용결격사유별 결격기간

사유	기간
급고 이상 형 집행	5년 미경과자
급고 이상 형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급고 이상 형 선고유예	기간중인 자
해임	3년 미경과자
파면	5년 미경과자

☑ ① [O]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등

- ② [O] 법 제32조의2(인사교류)에 의하면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O] 법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와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9 7급 선행정학 p.514

05.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 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답]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적 신제도주의라고도 하며 개별 국가마다 제도가 달리 형성되는 역사적 특수성(맥락)과 경로의존성을 중시하는 중범위수준의 거시적 신제도주의이론이다. 따라서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 ☑ ① [X]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인간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전제하나 선호는 선형적으로 주어진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선호 형성 자체에 대해서 제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 ② [X]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의 비대칭성(불균등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사적 제도주의이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문화와 상장을 강조하며 제도의 변화를 개인 간 상호작용에 의한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 ④ [X] 사회적 딜레마(집단행동의 딜레마 또는 공유지의 비극)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인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이다.

● 신제도론의 유파별 비교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학문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개념	제도 = 개인의 합리적·전략적 선택	개별국가의 역사적 맥락, 경로의존성	사회문화 및 상징, 동형성
중점	제도의 균형성	제도의 지속·상이성	제도의 유사성
차원	개인	국가	사회
측면	공식	공식	비공식
범위	좁음(미시)	중범위(거시)	넓음(거시)
변화	거래비용 감소	결정된 균형	동형화(Isomorphism)
선호	외생적	내생적	내생적
접근	연역적	귀납적	귀납적

☞ 2019 7급 선행정학 p.161

06.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유인적 도구(carrots), 정보적 도구(serrmons) 등으로 유형화한다.
- ② 권위(authority)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 ③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④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답] ④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유사시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 ☑ ① [O] 비딩(Vedung)은 정책도구를 에치오니(Etzioni)의 권력 분류(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규범적 권력)에 근거하여 ①규제적 도구(stick, 채찍), ②유인적 도구(carrots, 당근), ③정보적 도구(serrmons, 정보제공) 등으로 유형화하였다(정정길).
- ② [O] Hood, Hood & Margetts, Howlett & Ramesh 등의 통치자원 분류방식을 적용하여 정책수단을 분류하면 ①조직에 기반을 둔 수단(정부기관, 공기업, 시장조직 등), ②권위에 기반을 둔 수단(규제정책), ③자금에 기반을 둔 수단(재정인센티브, 대출, 조세지출, 바우처, 공적보험 등), ④정보에 기반을 둔 수단(공공정보, 권고 또는 설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위에 기반을 둔 수단은 규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 ③ [O]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며, 특히 이념적

지향가치(진보 또는 보수 등)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직접성 기준)

직접성	수단	개념
낮음	손해책임법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보조금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시 생산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지급보증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을 정부가 보증
	기업지원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등
중간	바우처	빈곤층 소비자에게 쿠폰(이용사은권)을 지급
	조세지출	조세감면에 의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행을 지원
	계약(위탁)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생산을 민간에게 위탁
	사회 규제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높음	벌금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패널티 부과
	부과금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불이익(부담)을 주는 교정적 조세
	공적보험	유사시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직접대부	정부가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게 직접 대출
	경제규제	민간의 경제활동을 직접 규제(인허가 등 진입규제)하여 집행
	공공정보	정부가 민간에게 공적정보를 직접 제공(공개)
	공기업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의하여 정책을 집행
	정부소비	정부가 공적조직을 만들어 예산으로 직접 시행

☞ 2019 7급 선행정학 p.191

07. 다음 중 예산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짝 지은 것은?

한정성 원칙

- ① 목적세
② 예비비
③ 이용과 전용
④ 계속비

단일성 원칙

- 특별회계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기금

[답] ④ 한정성(한계성)의 원칙은 예산의 사용목적·사용금액 및 사용기간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목적의 사용금지(절적 한정성)의 예외로 이용·전용,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금지(양적 한정성)의 예외로 예비비와 추경예산, 회계연도 경과지출 금지(기간적 한정성)의 예외로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지출, 과거의 조상충용 등이 있다.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은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이 있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원칙	개념	예외
공개성 원칙	예산내역 국민에게 공개	신임예산, 기밀정보비(국정원 예산)
명료성 원칙	내역별로 명확하게 명시	총괄예산
완전성원칙	빠짐없이 계상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
단일성원칙	가급적 하나로 편성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한정성원칙	절제한정성(목적외사용X)	이용, 전용
	양적한정성(초과사용X)	예비비, 추경예산
	기간적 한정성(회계연도 독립)	이월, 계속비, 지난연도 수입과 지출
통일성원칙	특정세입의 특정세출 연계금지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사전의결 원칙	집행전 의회의결 필요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정확성원칙	예산과 결산내역 일치	

☞ 2019 7급 선행정학 p.605

08.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의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②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③ 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 시키는가, 즉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 ④ 사이먼(Simon)은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답] ② 폴 디징(P.Diesing)은 합리성을 5가지(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 H.Simon의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① 목표성취에의 기여여부 ② 결과적·객관적 합리성 ③ Simon은 인간의 인지능력상 한계로 인하여 내용적 합리성 포기
절차적 합리성	① 이성이나 인지력과 결부된 합리성 ② Simon이 만족모형에서 중시한 합리성 ③ 결과보다는 주관적·과정적·제한된 합리성

● P.Diesing의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
경제적 합리성	비용·편익을 측정하여 경제적 목표(대안) 평가
사회적 합리성	사회체제의 구성요소간의 조화로운 통합성
법적 합리성	예측가능성, 공식 질서, 대안의 합법성
정치적 합리성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 (가장 비중이 큼)

☞ 2019 7급 선행정학 p.97

0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мок(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 ②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드(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③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답]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 과정설의 입장에서 공익(사익의 총합)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 ☑ ① [O] 디мок(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능률을 금전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다양한 가치의 통합여부 등 사회 전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O]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드(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③ [O] 롤즈(Rawls)는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리를 동등한 자유의 원리와 차등조정 원리로 나누고 차등 조정의 원리를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누었다.

● 실체설과 과정설의 비교

실체설	과정설
적극설	소극설
전체주의	개인주의
선형적	경험적
공익 ≠ 사익의 합	공익 = 사익의 합
합리모형	점증모형
개도국	선진국
권위주의	다원주의
정부의 역할은 국민관	정부의 역할은 조정자
Plato, Aristoteles, Rawls 등	Sorauf, Hume, Hobbes, Schubert 등

☞ 2019 7급 선행정학 p.84

10.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지배했다.
- ③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답] ③ 미국 행정학 성립의 진보적 행정개혁운동으로 1906년 뉴욕시 정연구회, 1910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aft위원회) 결성 등 행정개혁운동 전개 및 행정에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하였다. 특히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 ☑ ① [X]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높였으나 정책수행과정에서 공익의 전리품화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 ② [X]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 연방주의(Hamiltonianism)가 제기되었지만 해밀

튼주의가 당시 미국 정치상황을 지배했다기보다는 상당 기간 동안 제퍼슨 등 반연방주의자들의 반대도 존재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갈등이 남북전쟁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부채 상황방식과 연방중앙은행 창설 등을 둘러싸고 미국복동부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던 Hamilton (연방주의자)과 남부출신 Jefferson(분권주의자)은 서로 상반된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사사건건 극심한 대립을 벌였기 때문이다.

- ④ [X]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윌슨(W.Wilson)은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애플비(Appleby)는 정치·행정의 분리에 대해 반발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융합적, 정합적, 연속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 미국관료제의 규범적 모형

해밀턴 연방주의	중앙집권에 의한 능률적 행정
제퍼슨 자유주의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적 행정
매디슨 다원주의	이익집단의 이익 조절과 균형
잭슨 민주주의	연관주의에 의한 공직정결과 책임행정

☞ 2019 7급 선행정학 p.112

11.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②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③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④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답]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위한 독립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인사행정을 통일적이고 집권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 ☑ ② [O] 실적주의는 능력중심의 인사제도이므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③ [O] 미국의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제정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④ [O]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권익과 신분이 보장되므로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 실적주의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기회 균등으로 민주주의 평등이념 구현 ② 정치적 중립 : 공익 대변 ③ 행정의 전문화 ④ 신분보장-직업적 안정성 ⑤ 행정의 자율성·도구성·능률성 확보	① 인사의 소극성·형식성 ② 집권화 - 부처의 탄력적 인사 저해 ③ 인사 융통성 저해 ④ 능력중심의 기술적 한계 ⑤ 대응성·책임성 저해 ⑥ 대표성·형평성 저해 - 소외집단에게 불리 ⑦ 보신주의 등 소극적 행태

☞ 2019 7급 선행정학 p.471

1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② 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④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 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답] ② 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욕구의 상향적·단계적 충족만을 중시한 Maslow의 이론과 달리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갈등상태의 지속을 원하지 않으므로 하위욕구로 하강하여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 ☑ ① [X] 매슬로우(Maslow)의 욕구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역으로는 후퇴할 수 없다고 본다.
 ③ [X]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나 보수 등 근무환경을 불만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 Herzberg의 욕구충족2개요인론

요인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성격	물리적·환경적·대인적 요인 (직무책략 및 근무환경요인)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 (직무요인)
예	정책과 관리, 임금, 지위, 안전, 감독, 기술, 작업조건, 조직의 방침과 관행, 인간관계(감독자와 부하, 동료 상호간의 관계) 등	성취감(자아 계발), 책임감, 승진, 인정감, 직무충실,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보람, 성장 및 발전 등 심리적 요인

- ④ [X]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나 업적이 구성원의 만족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만족은 성과에 환류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 2019 7급 선행정학 p.332

13.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ㄴ. 검사
 ㄷ.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ㄹ. 도지사의 비서
 ㅁ. 국가정보원 직원

-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답] ④ ㄴ, ㄷ, ㅁ만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 ㄱ [X] 정무직 공무원
 ㄴ [O] 특정직 공무원

- ㄷ [O] 특정직 공무원
ㄹ [X] 별정직 공무원
ㅁ [O] 특정직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의 예시

구분	근거개별법	종류와 계급(직급)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법관	법원조직법	대법원장-대법관-법관(판사)	
검사	검찰청법	검찰총장-검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14~1등급), 고위외무공무원(가,나등급)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11개)	자치경찰공무원(제주도):자치경무관~자치순경(8개)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	소방총감(소방청장)-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11개)	지방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감-지방소방사(10개)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 교원 및 조교 : 유치원, 초·중·고, 국립대 ● 교육전문직원 :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 교원 및 조교 : 공립대학·전문대학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군인	군인사법	모든 군인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일반군무원(1~9급), 기능군무원(기능5~9급)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헌법연구관	
국정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법	특정직직원(1~9급)	
경호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법	경호공무원(1~9급)	

● 정무직공무원의 예시

구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의원 ●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¹⁾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무원 ²⁾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 담당 또는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 (법령 등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국회 사무총장·입법차장·사무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감사원 감사위원·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차장, 행정각부의 차관 및 처·청의 장, ³⁾ 국가정보원 차장,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안전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	● 서울특별시정부무시장⁵⁾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도지사 후보시 임명 예고된 자의 경우) 등

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차장, 국회의장·국무총리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행정1·2부시장 ⁴⁾	
--	--

- 1)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지만 법관신분이므로 특정직공무원임
- 2)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합동참모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특정직공무원임
- 3)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은 특정직공무원임
- 4) 특별시가 아닌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임
- 5) 특별시가 아닌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정부부시장·정부부지사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관리관임

● 별정직공무원의 예시

구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좌업무 수행 직위	비서,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비서, 비서관
특정 업무 수행 직위	● 국회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사무처·도서관의 담당관 ●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사법연수생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지방의회 전문위원 ● 광역시·특별자치시의 정부 부시장 및 도·제주특별자치도의 정부부지사¹⁾ ● 국제관계대사

- 1)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정부부시장·정부부지사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함

☞ 2019 7급 선행정학 p.490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③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④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

[답] ④ 기관통합형 집행기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 없이 민선위원이 행정을 맡게 되어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 ① [X] 우리나라는 단체장의 권한이 의회보다 강한 강력시장제적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 ② [X]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기관대립형의 유형 중 집행기관 직선형에 해당한다. 영국의 의회형은 기관통합형으로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그 밑에 분과별 집행위원회나 국·과 등 보조기관을 두고 집행기능까지 수행한다.
- ③ [X] 미국의 위원회형(commission plan)은 기관통합형의 전형적 형태로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3~7명의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하계 수행하는 방식이다.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장 ①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 용이

점	② 의회중심의 운영으로 갈등과 대립소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 ③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④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⑤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⑥ 집행기구 구성에까지 주민대표성 확보
단점	①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 우려 ②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 없어 행정의 전문화 저해 ③ 의원 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④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우려 ⑤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 2019 7급 선행정학 p.803

15.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 ☑ ① [X]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중 8호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X]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1천만 원이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 ④ [X]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6조).

☞ 2019 7급 선행정학 p.571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가진다.
- ②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 ③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④ 브레넌과 뷰캐넌(Brennan & 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답]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자기보존 및 세력 확장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요인(부하배증과 업무배증)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부하배증의 법칙은 경쟁자인 동료 대신 부하를 늘리려는 성향을 말하고, 업무배증의 법칙은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감독, 지시, 보고 등 파생적 업무를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말한다.

- ☑ ② [O]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Parkinson은 영국 해군성의 경우 합정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직원의 수는 매년 5.75%씩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 ③ [O] 공무원은 부하배증의 법칙에 따라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④ [O] 브레넌과 뷰캐넌(Brennan & 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관료제국주의 입장과 동일한 현상이다.

● 파킨슨(Parkinson)의 법칙

- (1) 의의 :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늘어난다는 법칙.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관료제국주의

(2) 하위법칙 : 상호작용

 - ① 부하배증의 법칙 : 경쟁을 꺼린 나머지 동료보다 부하를 증원하려는 심리
 - ② 업무배증의 법칙 : 감독, 보고 등 파생적 업무가 서로 창조되는 현상

☞ 2019 7급 선행정학 p.40

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답] ③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다.

☞ 2019 7급 선행정학 p.722

18.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활용하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① [O]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35조).
- ② [O]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에 위해 매년 6월24일을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의3).
- ④ [O]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4조).

☞ 2019 7급 선행정학 p.755

19. ㉠, ㉡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 (㉠)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들은 비판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 (㉡)은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

㉡

- ① 밀즈의 지위접근법 달의 다원주의론
- ② 밀즈의 지위접근법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③ 헌터의 명성접근법 달의 다원주의론
- ④ 헌터의 명성접근법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답] ③ ㉠은 헌터의 명성접근법, ㉡은 달(R.Dahl)의 다원주의론에 해당한다. 헌터(Hunter)의 명성접근법은 전국적 차원의 연구를 시행한 Mills와 달리 지역사회(아틀란타市) 차원의 권력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은 조용히 수용한다는 미국의 엘리트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달(R.Dahl)의 다원론은 엘리트는 대중의 선호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미국 도시가 다원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에 의하여 권력의 두 얼굴 중 권력의 밝은 얼굴만 보았을 뿐 어두운 모습을 간과했다고 비판받았다.

● 엘리트이론의 변천과 유형

유럽의 엘리트이론	파두제의 철칙(Michells)	소수 엘리트가 다수 일반대중을 지배하는 현상은 철칙	계급, 능력 중심의 엘리트이론
	2080법칙(Pareto)	소수 20%가 다수 80%를 리드	
미국의	지위접근법	권력은 사회적 지위에	계급이나 능력

엘리트이론	(Mills)	서 나옴(전국적 차원)	이 아닌 지위나 명성으로 설명
	명성접근법(Hunter)	권력은 사회적 명성에서 나옴(지역적 차원)	
신엘리트이론	무의사결정론(Baratz 등)	지배엘리트들에 의한 의도적 무결정(기각, 방치)	권력의 두 얼굴 중 다원론은 밝은 얼굴만 보았다고 비판

☞ 2019 7급 선행정학 p.206

20.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 ③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답] ④ 예산운영의 다중합리성모형(Thumaire & Willoughby)은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미시적으로 분석한 모형으로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입, 세출, 균형, 정책, 과정 등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예산과정 각 단계(흐름)별로 서로 다른 복수의 합리성(경제적 합리성 뿐 아니라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합리성 등)과 환경이 예산관료들의 행태를 지배(영향)하므로 단계별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는 과정적 접근법이다.

- ☑ ① [X]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으로 이상적·규범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점증주의 현실적·실증적 성격이 강하다.
- ② [X] 예산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한계이다. 점증모형은 현실이나 기득권을 인정한 채 점진적 개선만을 추구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 ③ [X] 단절균형모형이란 Baumgartner & Jones가 주장한 모형으로 예산이 급격한 변화나 단절을 겪은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모형이다. 이는 예산이 전년대비 일정 정도의 변화에 그친다는 점증주의예산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대폭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합리모형과 궤도를 같이 한다. 예산결정자가 사후후생을 고려하기보다는 최악을 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선택론 중 Niskanen의 예산극대화가설의 특성이다.

● 정부예산에 관한 미시적 이론

합리주의	기회비용 기준 등 계량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최적의 예산 배분방안을 강구하는 규범적 방법 (PPBS, ZBB 등)
점증주의	현실상황을 인정하고 전년대비 일정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배분을 지향.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현실적 접근법으로 반혁신적 모형
공공선택론	관료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가정. 사후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가와 달리 관료들은 개인효용이나 소속부서의 예산 극대화가 목적함수
다중합리성 모형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미시적으로 분석한 모형으로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입, 세출, 균형, 정책, 과정 등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예산과정 각 단계(흐름)

	별로 서로 다른 복수의 합리성(경제적 합리성 뿐 아니라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합리성 등)과 환경이 예산관료들의 행태를 지배(영향)하므로 단계별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적 접근법
단절균형 모형	예산이 급격한 변화나 단절을 겪은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모형으로 예산이 전년대비 일정 정도의 변화에 그친다는 점증주의 예산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

☞ 2019 7급 선행정학 p.635